

## 제189호 (2009. 1. 12)

---

### ■ 속보/위기의 건설업

- 녹색 뉴딜 사업-96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

### ■ 경제 동향

- 12월 CBSI 22.7p 상승, 지수 자체는 40선 밀돌아 여전히 ‘암울’

### ■ 정책·경영

- 2009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주요 제도 분석

### ■ 정보 마당

- “PMP-프로젝트 관리 능력의 객관적 입증 기준으로 가치 상승”

### ■ 연구원 소식

### ■ 건설 논단 : “명칭만 바꿨다고 ‘친환경’ 안 돼...다핵형 광역경제권으로 바뀌어야”

## 녹색 뉴딜 사업-96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

- 경기 침체 대응 및 친환경 미래성장동력 확보 목적, 총 50조원 투자 계획 -

- 정부가 녹색 뉴딜(Green New Deal)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기로 한 것은 ‘친환경’의 틀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한편 일자리를 대량으로 창출해 보자는 의도임.  
- ‘친환경적’인 개발은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향후 미래 개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큼.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성장동력을 확보하자는 2가지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녹색 뉴딜 사업은 크게 ① 녹색 SOC 사업, ② 저탄소·고효율 산업 기술, ③ 친환경·녹색 생활 등 3가지임.

### ■ 녹색 뉴딜 사업의 주요 내용

- 녹색 뉴딜 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녹색 SOC 사업 : 4대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구축, 녹색 국가 정보 인프라 구축
  - ② 저탄소·고효율 산업 기술 : 대체 수자원 개발과 중소담 건설, 그린카·청정 에너지 보급, 자원 재활용 확대

#### <녹색 뉴딜 핵심 사업>

사업명	재정 소요(억원)			일자리(명)		
	기 반영 (2009년)	추가 소요 (~2012년)	계	기 반영 (2009년)	추가 소요 (~2012년)	계
4대강 살리기 등	4,881	139,895	144,766	7,000	192,960	199,960
녹색 교통망 확충	18,349	78,187	96,536	25,042	113,025	138,067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250	3,467	3,717	816	2,304	3,120
우수유출시설, 중소담	1,845	7,577	9,422	3,063	13,069	16,132
그린카 및 청정에너지 보급	3,209	17,318	20,527	1,643	12,705	14,348
폐기물자원 재활용	506	8,794	9,300	2,377	13,819	16,196
녹색 숲 가꾸기	3,131	21,043	24,174	22,498	148,204	170,702
그린홈·그린스쿨 사업	-	80,500	80,500	-	133,630	133,630
eco river 조성 등	52	4,786	4,838	393	10,396	10,789
기타연계사업(27개)	-	-	106,712	-	-	253,476
합계			500,492			956,420

자료 : 기획재정부.

③ 친환경·녹색 생활 :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에너지 절약형 그린홈오피스 및 그린스쿨 확산, 쾌적한 녹색 생활 공간 조성

- 녹색 뉴딜 사업은 우선 성장 및 일자리 파급 효과가 큰 핵심 사업을 중점 추진함. 4대강 살리기와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등이 대표적임.
  -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기업, 민간까지 역할을 분담하며, 예비타당성 검토 완화 등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임.

#### ■ 녹색 뉴딜 사업의 향후 추진 계획 및 효과

- 정부는 녹색 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 그린홈·그린빌딩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이 추진되고 에너지소비총량제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준이 강화되며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을 우수 조달 물품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됨.
  - 경제 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 등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조사 수행 기간을 4개월 이내로 단축해 사업 준비 기간을 실질적으로 1년 단축하도록 할 계획임.
- 녹색 뉴딜 사업 36개를 위해 정부는 추가로 45조원을 투입하기로 하였음. 이미 반영돼 있는 재정(4조 3,626억원)까지 합치면 총 50조원이 투자될 예정임.
  - 이에 따라 창출되는 일자리는 이미 반영된 예산에 따라 생길 것으로 예상됐던 9만 3,000개 외에 86만 3,000개가 더 생겨 모두 95만 6,000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큰 사업은 4대강 살리기 및 연계 사업으로 18조원 투자에 28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며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3조원)를 통해서도 23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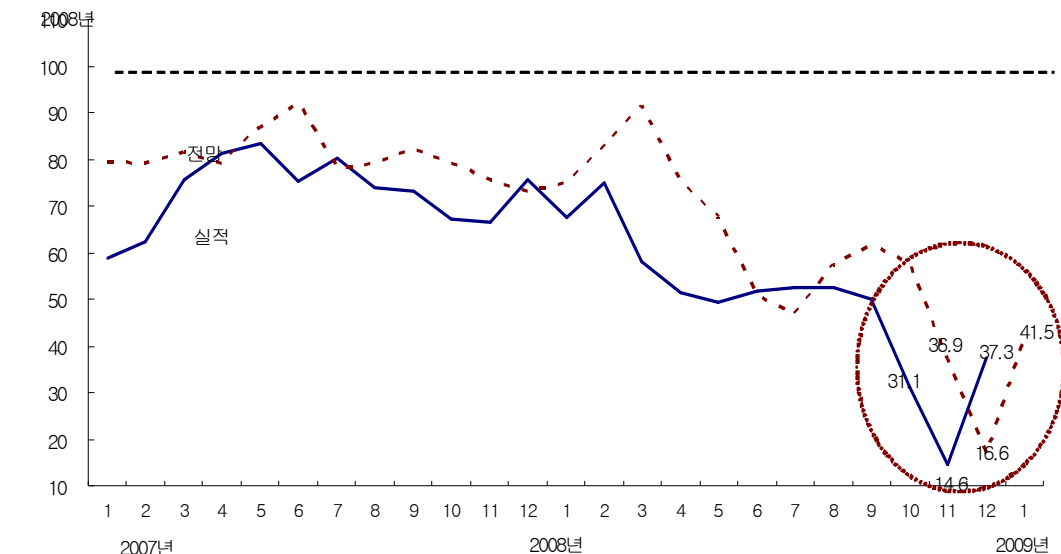
박성민(연구위원·smpark@cerik.re.kr)

## 12월 CBSI 22.7p 상승, 지수 자체는 40선 밑돌아 여전히 ‘암울’

– 1월 전망치도 41.5에 불과…단기간 내 침체 개선은 어려울 듯 –

- 지난 2개월 동안 사상 최대의 낙폭을 기록한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12월 들어 SOC 예산 증액 및 선집행, 전월 기저효과에 따른 통계적 반등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는 40선에 못 미쳐 체감 경기 침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CBSI 지수는 미분양 아파트 증가에 따른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 심화로 지난 10월 이후 2개월 동안 단기간 사상 최대 낙폭인 35.5p나 급락해 사상 최저치를 2개월 연속 갱신하며 11월에는 14.6을 기록했다.
- 12월 들어서는 주택 경기가 이미 최악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악재가 없었고, SOC 예산 증액 및 선집행, 연말 발주물량 증가 등으로 상황이 다소 나아진 가운데, 지난 2개월 동안 지수가 급락한 것에 대한 통계적 반등도 영향을 미쳐 지수가 전월대비 22.7p 증가한 37.3을 기록함.
- 그러나 지수 자체는 아직 40선에 미치지 못해 체감경기 침체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1월 지수 전망치도 41.5에 불과해 아직 주택 수요 침체 및 미분양 아파트 적체 사태가 여전한 가운데 단기간 내 체감 경기 침체 수준이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나타냄.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추이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업체 규모별로는 지난 11월에는 대형, 중견, 중소기업체 모두 사상 최저치를 갱신했는데, 12월 들어서는 대형 업체가 전월 대비 38.5p 상승하여 지수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중견, 중소기업체 역시 전월 대비 각각 18.5p, 9.1p 상승한 35.7, 28.8을 기록함.
  - 지난 11월 전월 대비 무려 36.7p나 하락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던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 지수 급락에 따른 통계적 반등과 연말 발주 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12월에는 지수가 38.5p 상승하여 지수 반등을 주도함.
  - 대형업체보다 한 달 앞선 10월에 26.6p나 하락함으로써 사상 최저치인 17.9를 기록한 이후 지난 11월도 소폭(0.7p) 하락했던 중견업체 지수도 12월 들어서 18.5p 상승해 35.7을 기록함.
  - 11월에 전월 대비 10.9P 하락한 19.7을 기록하여 지난 6월의 사상 최저치인 26.5를 6.8p 재갱신한 중소기업체 지수 역시 전월비 9.1p 상승한 28.8을 기록함.
- 공사물량지수 역시 연말 발주 물량 증가 및 통계적 반등으로 전월 대비 22.8p 상승한 62.7을 기록했는데, 특히 토목물량지수가 연말 공공발주 증가로 전월 대비 36.2p 상승한 82.5를 기록하여 지수 상승을 주도함.
  - 일반적으로 토목물량지수는 연말 공공 발주 증가에 따라 12월에는 전월 대비 증가하는데, 특히 이번에는 연말 발주 집중 현상이 두드러져 지수가 전월 대비 36.2p 상승한 82.5를 기록하며 물량지수 상승을 주도함.
  - 지난 8~11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한 비주택물량지수 역시 12월에는 연말 발주 물량 증가, 그동안 하락 지속에 따른 통계적 반등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20.2p 상승한 49.9를 기록함.
  - 반면, 비주택물량지수와 더불어 지난 8~11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한 주택물량지수는 12월에도 연말 발주 물량 증가, 통계적 반등 등이 나타나지 않고 전월 대비 소폭 (2.9p) 상승한 31.2에 그쳐 침체 수준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사 물량 축소로 인력 및 자재 부문의 수급과 비용 지수가 기준선인 100 내외의 수치를 기록해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자금조달 및 공사 대금수금지수는 46.4, 58.0에 불과해 자금 관련 상황이 계속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이홍일(연구위원·hilee@cerik.re.kr)

## “세 부담 완화해 미분양 주택 해소 적극 지원”

- 2009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주요 제도 분석 -

### ■ 부동산 세제…세부담 완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지원대책 시행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으로 양도세 부담 완화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 8%·최대 80%(10년 이상 보유)로 확대, 일시적 2주택자 중복 보유 기간 2년으로 연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실거래가액 9억원으로 인상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완화(1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향후 2년 간(2009. 1. 1~2010. 12. 31)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신규 취득하는 주택(2년 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
    - \* 2주택 : 50% → 6~35%(2010년 : 6~33%), 3주택 이상 : 60% → 45%
  - 1세대 1주택자가 고향 주택(지방 소재)을 취득하거나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 소재의 1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 1세대 2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가 적용 되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 확대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 상향조정(1월), 인별 과세 방식으로 전환, 세부담 상한선 축소
  -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 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실질과세 기준금액이 9억원으로 상향 조정. 장기보유자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 공제(10~30%)를 신설, 비수도권 소재 1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2011. 12. 31까지 한시 면제
  -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축소
-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감면
  - 2008. 11. 3~2010. 12. 31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양도세 중과(일반세율)를 면제하고 10년 간 장기 보유시 특별 공제(연 8%, 최대 80%) 적용
- 재당첨 금지 조항의 한시적 배제 및 공공 택지 내 분양주택의 전매 제한 완화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돼 재당첨 금지 기간(3~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의 민영주택 청약 기회 제공
  - 공공 택지 내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5~7년에서 1~5년으로 축소

## ■ 재건축·재개발 사업 관련 규제 완화로 도심지 내 주택 공급 활성화 도모

- 서울시 재건축 용적률 최대 300%까지 상향 조정,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모두 완화
  - 서울시 재건축 단지는 현 2종 210%, 3종 230%인 용적률을 최대 40~70% 상향 가능
  -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은 기존 60m<sup>2</sup> 이하, 85m<sup>2</sup> 초과~85m<sup>2</sup> 이하, 85m<sup>2</sup> 초과를 각각 2:4:4에서 85m<sup>2</sup> 이하를 기준으로 6:4의 비율하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세부적 기준 위임
  - 재건축단지의 임대주택의무건설제도는 임대주택이 아닌 보금자리주택으로 대체 공급 허용(초과 용적률의 30~50%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
- 재개발·뉴타운 지분 쪼개기 차단(3월)을 위한 조합원 자격 인정 기준 강화
  - 지자체장이 재개발 또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정하는 조합원 인정 기준일까지 토지를 소유한 사람만 조합원 자격 인정

## ■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공급 방식의 다양화

- 보금자리주택 사전 예약제 방식으로 첫 분양, 단지형 다세대 주택공급제도, 역세권 개발 방식 도입으로 도심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 보금자리주택은 3월까지 하위 법령 정비를 완료, 6월까지 시범지구를 지정하여 사전 예약제방식으로 첫 분양 예정임. 인근 지역 신규 분양주택보다 분양 가격이 15% 저렴
  - 다세대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단지형 다세대제도 도입, 광역 개발이 가능한 도심 역세권 개발 활성화로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
  - 신혼부부주택 청약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로 단축, 불임 부부, 무자녀 신혼 부부 등에게도 3순위 허용(단, 혼인 기간이 5년 미만)하는 등 공급 대상 확대

## ■ 기타 바뀌는 제도

- 저에너지 친환경주택인 그린홈 건설 촉진을 위해 주택성능등급 표시 대상(에너지성능등급)을 현재 500세대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 시행
- 상반기 중 330m<sup>2</sup> 이하 신도시 지정, 개발권이 국토해양부에서 광역지자체로 이관
- 그동안 중개법인은 사업 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미분양 건축물에 한해서만 분양대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 분양대행업무 수행 가능

김현아(연구위원·hakim@cerik.re.kr)

## “PMP-프로젝트 관리 능력의 객관적 입증 기준으로 가치 상승”

- 혁신의 일환으로 프로젝트형 업무 방식 도입 추세, PMP 중요성 부각 -

### ■ 프로젝트 관리의 중요성

- 프로젝트에는 프로젝트 관리자(PM), 프로젝트 리더(PL), 팀원, 고객, 경영자 등 수많은 이해당사자(stakeholder)가 참여하게 됨.
  - 이들 중 PM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PM을 포함한 프로젝트 팀원 모두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결정적 주체라고 할 수 있음.
  - 고객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프로젝트를 단순 경험과 업무 지식만으로 수행할 경우 실패의 위험이 커지게 됨.
  - 따라서, 이러한 위험들을 줄이기 위하여 PM에게 체계적인 지식과 도구 및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자격증이 바로 PMP 자격증임.
  - 최근 국내 기업들은 혁신의 일환으로 프로젝트형 업무방식을 도입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PMP 자격증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음.

### ■ PMP 자격이란

- 미국의 프로젝트 관리(PM) 전문기관인 PMI(Project Management Institute)가 주관하는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 인증 프로그램임.
  - PMI는 프로젝트 관리 영역의 표준 및 지식을 출판, 교육, 세미나, 컨퍼런스, 지역챗터, 대학 등을 통하여 전 세계로 보급하는 가장 권위 있고 잘 알려진 글로벌 리딩 전문 기관임.
  - PMP 자격의 목적은 프로젝트 관리 영역에서 개발, 유지, 평가, 보급, 행정 등에 대한 개인의 능력을 시험을 통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PMP 인증 프로그램이 1984년부터 시행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서 요구하는 PM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음.



- 프로그램의 실시 이후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으며 4년에 한 번씩 PMBOK(Projec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 업데이트와 함께 자격시험 문제 Pool을 업데이트해 그 객관성과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음.
- 현재 전 세계 1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약 28만 명의 공인된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 즉 PMP들이 활동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1만 명 이상이 PMP를 취득하였고, 실무에서 활동하면서 자격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고 있음.

### ■ PMP 취득 효과

- PMP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프로젝트를 잘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은 객관적 신뢰의 확보와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일 것임.
- 전문적 활동의 입증
  - PMP 자격은 프로젝트 접근법과 방법론, 그리고 프로젝트관리 실무 능력에 대하여 PMBOK을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프로젝트관리 이론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해야 함. 이를 통하여 프로젝트를 보는 시각 및 용어의 통일 등으로 업무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짐.
  - 또한, 응시자격으로 다년간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력과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이수가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PMP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프로젝트 실무 경력이 있으며 일정 수준의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음.
- 개인 가치의 상승
  - PMP 자격을 소유한 PM은 프로젝트 수행시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보다 철저히 준비하게 되고, PM으로서의 경쟁력 및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수 기회를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될 것임.
  - 한편, 최근 기업들이 프로젝트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PMP 자격을 가진 인력에게 가산점 및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어 개인의 가치 상승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장현승(연구위원:jang@cerik.re.kr)

##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1.6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정책과 자문회의 참여</li> <li>▪일자리 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자문</li> </ul>
1.8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정책과 시장분석팀 주관 EWS지표점검 회의 참여</li> <li>▪2008년 12월 부동산 관련 주요 지표들에 대한 점검 및 대안 모색</li> </ul>
1.9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 근로자 고용개선 TFT 회의</li> <li>▪건설 근로자 고용개선 2차 기본계획의 세부 추진 방향 논의 및 자문</li> </ul>

## ■ 기타 연구원 활동

### •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관련 세미나 개최

- 연구원은 오는 1.21(수) 오후 2시, 논현동 건설회관 2층에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바람직한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
- 프로그램 개요
  - 세미나명 :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바람직한 추진방향과 기대효과
  - 주 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제 1주제 : 해외의 하천개발 사례 및 4대강 정비사업의 추진방향(권오현 연구위원)
  - 제 2주제 :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한국형 녹색뉴딜사업 추진방향(지홍기 영남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 제 3주제 :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윤영선 기획조정실장)
-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 기획팀(02-3441-0815) 또는 연구원(<http://www.cerik.re.kr>) 홈페이지 참조

### • 서울대학교 공동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 제6기’ 모집

- 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ACPMP) 제6기’ 수강생 모집
- 과정개요
  - 교육과정 : 2009.3.24 ~ 11.23(주 1회 매주 화요일 17:00 ~ 21:30)
  - 모집대상 : 정부부처 및 지자체 부이사관급 이상, 건설업체 CEO 및 임원, 기타 건설 유관단체 간부
  - 원서접수 : 2009. 1. 19 ~ 2. 20까지
-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http://www.cerik.re.kr>) 또는 ACPMP(<http://acpmp.snu.ac.kr>) 홈페이지 참조

## “명칭만 바꿨다고 ‘친환경’ 안 돼...다핵형 광역경제권으로 바뀌어야”

10년 단위로 국토의 청사진을 그린다는 취지로 지난 1972년 시작된 ‘국토종합개발계획’은 2000년 ‘개발’을 뺀 ‘국토종합계획’으로 새로이 명명되어 제4차 계획이 막을 올렸다. ‘녹색국토’라는 새로운 목표가 추가됐고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또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개발’이 빠진 것은 환경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부각되면서 개발이 마치 ‘환경 파괴’의 주범인 것처럼 인식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명칭 변경과 같은 소극적인 변화로는 ‘친환경’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제4차 국토계획이 수립된 지 10년이 지났고, 경제 수준도 한결 여유로워졌다.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가치를 창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최근 대두된 ‘5+2’ 광역경제권 발전계획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원효율적인 국토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핵집중형이 아닌 다핵형의 광역경제권으로 개편해야 한다. 광역경제권 내에서는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 기능분담을 통해 균형발전을 꾀하고, 직주근접의 환경친화적인 공간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광역경제권의 도시들은 자원 사용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생태도시로 건설해야 한다. 또한 도시의 주요 거점은 주거, 상업, 업무기능을 복합적으로 포괄하여 고밀 개발되어야 한다.

지난 1980년대 미국에서는 도시의 공동화를 막고 교외지역의 주민을 다시 유인하기 위해 도심 복합개발을 적극 추진했다. 일본 도쿄의 록본기 힐스 개발사업도 도시재생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서울 청계천과 같이 도심에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병행 추진되는 경우도 많다. 도시 내의 건물은 조명, 냉난방 비용 절감, 친환경적 자재 사용을 통해 환경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빌딩의 경제적 및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도시 내 교통은 저탄소 녹색교통체계로 개편하여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전용도로 확보 등으로 자전거 사용을 적극 권장해도 좋을 것이다. 도시를 관통하는 또는 도시와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축의 개념도 부각되고 있다. 녹지와 개발제한구역, 옛길, 폐철도 및 폐도 구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큰 틀에서는 산맥, 하천 등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흔히 건설산업을 굴뚝산업, 사양산업이라고 하지만 친환경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했던 개발연대를 거치며 여력이 없어 관심을 두지 못했던 삶의 질,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가치를 다시 만들어가야 한다. 요즘 쟁점이 되고 있는 ‘4대강 물길살리기 사업’도 새로운 환경가치를 창출하는 여러 사업 중 하나다. 녹색성장의 임무를 짚어진 건설산업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파이낸셜뉴스, 2008. 12. 30>

김흥수(원장:infra@cerik.re.kr)

